

“9·7 대책 차질없이 이행할 것”

김윤덕 국토부장관
국회 국토위 국감서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 주택공급 촉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공공 주도 주택 공급과 함께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공급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며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7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유류 부지 복합 개발 △공공주택 용적률 완화 △기 신도시 선도지구 후속 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장관은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인·허가 단축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주택공급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균형발전과 관련, 김 장관은 “5·3특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

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난달에 착수한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통대책으로는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도로·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지역별 신흥항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

행철도(GTX)와 광역버스 등을 신속히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K-패스 고도화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 △항공안전 혁신방안 후속조치 신속 이행 △AI 등 첨단 기술 활용 도로·철도 안전관리 △LH 미분양 매입 및 공사비 현실화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도 제시했다.

/권희성 기자

매년 50조원 농수산물 무역적자

“수출 신화만 외칠 때 아니다”

민주 윤준병 의원 “농어민 피해 구제 위한 실질적 대책 시급”



민주 윤준병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매년 농수산물 수출 성과를 대적으로 홍보하는 가운데, 실제로는 농림축산산물 무역적자가 매년 5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수출 신화에 매몰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식품수출정보(Kaif)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농·림·축·수산물(식품·비식품 포함) 수출액은 128억5,010만 달러, 수입액은 488억9,400만 달러로 무역적자는 -359억5,390만 달러(한화 약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적자는 단일 연도의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2022년 -435억2,360만 달러(-61조5,000억원), △2023년 -381억5,540만 달러(-53조9,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역시 -359억5,390만 달러로, 최근 3년 연속 50조원 이상의 적자가 이어졌다.

반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99억8,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하며, ‘케이·푸드

(K-Food) 수출 신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428억5,000만 달러로, 수출액의 4.3배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7억2,980만 달러(약 10조9,000억원)로 무역적자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49억3,370만 달러), 호주(30억9,94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은 긍정적 성과”라면서도 “근본적인 무역적자 완화 대책과 농어민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농수산물 수출 실적 홍보에만 매달리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수입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보호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무역적자국과의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을 줄이는 한편,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위해서는 수출 실적 중심의 단기성과보다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보전과 소득안정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전북도민들, 지역 발전·새 인물에 목말라 있다”

혁신당 도당 여성위, 추석 민심조사 결과 발표

중점 추진 과제로 ‘지역균형발전·사법개혁’

전북 발전 관련 ‘지역인재 육성·청년 일자리 창출’

내년 지선과 관련해 ‘유능한 인재 발굴’ 등 꼽아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영심·사진)는 13일, 전주역과 완주 모악산 일대에서 진행된 ‘추석 민심청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수백 명의 도민이 참여했으며, △조국혁신당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전북 발전 과제

△정치인의 자질 △지방선거 기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도민들은 조국혁신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역균형 발전’(36.7%)과 ‘사법 개혁’(34.4%)을 꼽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그리고 정의로운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 것이



다. 또한 전북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는 ‘지역 인재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35.1%)이 1위를 차지해, 대규모 사업보다 사람 중심의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2026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유능한 인재 발굴 및 공천’(39.8%)과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35.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도민들은 기존 정치인 중심의 구조

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실력 있는 인물이 전면에 나서길 바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치인의 필수 자질로는 ‘도덕적 청렴성’(32.3%)이 가장 많이 꼽혀, 조국혁신당이 더욱 높은 윤리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도 확인됐다.

최영심 위원장은 “도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말뿐이 아닌 정책과 실천으로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민심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과 유능한 인재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원료의약품 공급중단 10년간 108건

중국·인도 의존 심화... 국내 생산기반은 취약

민주 박희승 의원 “공급망 다각화·자급화 시급”



국내 원료의약품 공급망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공급중단 사례가 100건을 넘어섰으며, 중국·인도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공급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108건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공급 문제로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일부 개선세가 보이긴 하지만, 8월 기준으로 여전히 6개 품목이 공급 중단 상태에 있는 등 불안은 현재진행형이다.

문제는 원료 수입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중국(26.8%)과 인도(8.8%)에서 수입한 비중은 35.6%였으나, 지난해에는 중국 36.3%, 인도 14.2%로 합계 50.5%에 달했다. 반면 국산 원료의약품 생

산 기반은 취약해, 해외 수입 차질이 곧 국내 공급 불안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최근에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복귀 움직임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지난 4월, 의약품 및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서에 착수하면서, 향후 국제 의약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희승 의원은 “의약품도 국가 안보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대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수출규제나 정세 변화가 있을 경우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공급망 다각화와 자급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원료의약품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내 원료 생산기반 강화, 해외 의존도 축소,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연도별 청약 조성액 5년 만에 10조원 ↓

청약 해지 사유 중 약 96%가 중도해지, 실제 당첨 해지 비율 4%

민주 신영대 의원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등 주거 안정 노력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청약 조성액이 △2020년 21.2조원에서 △2021년 23.1조원 △2022년 18.3조원 △2023년 15조원 △2024년 14.8조원 △2025년 8월 기준 10.6조원으로 규모가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와 비교해 2024년도 청약 조성액 규모가 35.9%나 감소한 것이다.

추가로 2022년 이후로는 청약통장 신규가입자보다 해지자가 더 많은 사실이 확인됐다. 청약 신규가입은 1,249만 좌, 해지는 1,424만 좌로 신규가입 건보다 175만 좌나 많다. 연령대별로 △3040은 신규(308만 좌), 해지(421만 좌) △5060은 신규(293만 좌), 해지(406만 좌) △7080은 신규(85만 좌), 해지(170만 좌)로 청약통장에 처음 가입하는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청약통장 해지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돌

아선 것이 청약 수요 감소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주택경기와 청약 수요는 비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낮은 청약 당첨률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것도 청약 이탈 현상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청약 해지 사유 중 약 96%가 중도해지였으며,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한 비율은 4%에 불과하다.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연령별 청약 당첨률은 전국 기준 △20대 이하 11.7% △30대 7.2% △40대 8.7% △50대 10.2% △60대 이상 9.4%이며 특히 서우는 전국보다 현저히 낮은 △20대 이하 0.9% △30대 1.1% △40대 1.3% △50대 1.6% △60대 이상 0.9%에 그쳤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청약 조성 규모의 감소는 국민들이 더이상 제도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국가 주택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HUG는 주택경기 회복, 실효성 있는 청약제도 마련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계절근로자 9만명 시대

현장 문제 해결이 우선”

민주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15,444명으로 2021년 7,340명 대비 13배 급증했다. 이는 농어업 현장의 인력난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2025년 기준 전라남도가 2만7,178명으로 가장 많은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었고, 경상북도 1만4,886명, 충청남도가 1만4,781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2025년 8월 기준 베트남이 3만13,938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계절근로자의 급격한 확대 속에서 불법체류 전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78명 수준이던 불법체류자는 2024년 1,295명으로 4.6배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671명이 추가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것으로 확



민주 이성윤 의원

실했다. 특히 최근 2년간 경남 거창, 전남 해남, 강원 영월 등지에서는 불법 브로커가 근로자에게 강제

채출을 시키고 일부 임금을 갈취하는 사건이 적발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과 브로커가 결탁한 사례도 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의원은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고려할 때 계절근로자 제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양적 확대에만 매몰되면 불법체류, 브로커 범죄, 인권 침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출입국관리법 및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과 관련, 정부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보이스피싱 수단 ‘대포통장·대포폰’

제3자 명의도용 품목 30만건 넘어

민주 한병도 의원 “취약계층 대상 범죄, 엄정한 처벌 필요”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품목이 3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품목은 총 30만 3,282건에 달했다. 이 기간 검거인원은 5만 6,466명, 이 중 1,174명은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대포통장 검거 건수가 2021년 6,224건에서 2023년 7,40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8월 기준)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

이다. 대포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은 점점 조직화·자동화되고 있다.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유인해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뒤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인터넷뱅킹 등에 이용하는 등 자금세탁·결제사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이제 보이스피싱의 기본 도구가 됐다”며 “자금세탁, 불법도박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조를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명의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와 처벌,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